

‘오 책임론’ 공방 사활건 지선 전초전…핵심변수 ‘서울민심’ 어디로

중 인 여의도 결정적 전장 떠오른 ‘서울시장 선거’

민주당 유력후보 김민석 총리 시정개입 행보 포석
당정, 정책 발맞출 서울시장 교체 필요 직간접 어필
국민의힘 ‘스토커’ 표현 불사 총력엄호 효과는 미미

내년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에 서 서울의 전략적 가치가 다시 한번 조명받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가 선제적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며 ‘서울 탈환’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한 모양새다. ‘서울시장 교체’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함께, 이어질 총선 및 정권 재창출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적 지점으로 강하게 부각되면서 ‘결정적 전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왜 서울시장인가?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정권 교체의 분수령마다 서울 민심의 변화가 핵심 변수로 작용했던 전례가 반복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의 정책 일치, 특히 부동산 정책에 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한 변수다.

그런데 오 시장은 민심에 매우 민감한 대목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민간 주도의 공급 확대와 서울시가 주도하는 빠른 사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여권과 민주당 일각에서는 “서울시장이 정부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주택시장 안정, 부동산 정책의 효과성,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기 어렵다”며 현행 오세훈 시장 체제의 교체 필요성을 직간접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강버스’, ‘신속통합기획’ 등 오 시장의 역점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단순한 정책 실패 공방을 넘어, 향후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 결집과 본격적인 선거전 돌입의 신호탄으로 해석되고 있다.

◆국감서 시작된 ‘공세의 서막’…오세훈 향한 민주당의 집중포화
공세의 시작은 지난 10월 서울시 국정

감사였다. 민주당은 ‘명태군 게이트’로 불리는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오 시장을 향해 전방위 압박을 폈다. 명태군 씨가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후보 캠프 일부에 여론조사를 무상 제공했다”고 주장하자, 여당 의원들은 불법 정치자금 및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거듭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며 강경히 부인했지만, 여당은 국정조사와 검찰 수사까지 거론하며 공세의 끈을 놓지 않았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서울시의 행정 투명성을 따지기 위한 정당한 검증”이라며 “정책뿐 아니라 정치적 도덕성 문제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보복성 청문’으로 규정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여론은 이미 ‘야당 공세 - 시장 방어’ 구도로 옮겨갔다.

◆한강버스 사고 이후 본격화된 ‘안전 프레임’… ‘시민보다 정치가 우선’

국감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오 시장의 대표 브랜드 사업인 ‘한강버스’가 사고를 내면서 공세는 한층 강화됐다. 최근 한강버스가 강바닥에 걸려 운항이 중단된 사건 이후, 민주당은 TF(오세훈 시정실패 정상화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즉각 서울시 에 대한 안전 책임을 물었다. 천준호 TF 단장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사업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운항 전면 중단과 재검검을 요구했다. 홍의표·박홍근·김영배 등 차기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사들도 한목소리로 “안전보다 정치적 이벤트가 먼저였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민주당 서울시장 유력후보로 거론되는 김민석 국무총리는 전면에 나섰다. 그는 행정안전부·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한강버스 사업의 전면 점검을 지시하며 “시민 안전과 제도적 점검체계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정부 차원의 ‘행정 감시선’을 가동한 셈으로, 오 시장의 서울 시정에 대한 정부의 개입 폭이 점점 넓어지는 모습이다.

◆유력후보 김 총리, 광화문 ‘감사의 정원’ 및 종로 재개발 등 잇단 견제

김 총리는 한강버스에 이어, 서울시의 ‘감사의 정원’ 조성사업에도 제동을 걸었다. 그는 광화문 인근 공사 현장을 직접 찾아 “세종대왕과 이순신을 모신 공간에 군사적 조형물을 세우는 것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법·절차적 정당성을 살펴보고, 필요하면 대체 부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사업은 6·25 참전 22개국에 대한 감사의 의미를 상징물로 표현하는 서울시 주도 프로젝트로, 오 시장이 직접 추진해 온 대형 상징사업이었다. 그러나 김 총리는 “외국에서 받기로 한 돌이 아직 확약되지 않았다”며 공사 강행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유독 오 시장 사업 만을 문제 삼는 것은 정치 개입이자, 사전선거운동”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하지만 김 총리는 “특정 정치

적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종로 앞 재개발사업 또한 여권의 공세 대상에 포함됐다. 김 총리는 “문화재 보호와 도시 재생의 균형을 고려하지 않은 근시안적 정책”이라고 지적했고, 민주당에서는 “서울시의 개발 중심 행정이 여전히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확산시켰다.

◆민주당 후보군, ‘시정 실패 프레임’으로 결집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군은 이미 ‘오세훈 책임론’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다. 사실상 출사표를 던진 박주민 의원은 “시민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시정”이라고 직격했다. 홍의표·박홍근·김영배 의원 등 주자들은 서울 시장이 주축하는 정치토론회마다 참석해 “서울은 민주당이 반드시 되찾아야 할 상징적 도시”라며 오 시장의 정책 실패, 안전 불감증, 행정 독주를 핵심 공격 포인트로 삼고 있다. 당 차원에서는 오 시장에 대한 위증 혐의 고발과 관련 법적 대응까지 추진 중으로, 내년 지방선거를 향한 ‘서울 탈환 구상’이 점점 구체화되는 분위기다.

◆“서울은 전국정치의 바로미터”…총선·대선까지 흔드는 여의도의 ‘대전선’

여야 정치권은 서울시장 선거를 단순한 지방선거가 아닌 전국 정치 재편의 바로미터로 보고 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지방선거 전반의 향방뿐 아니라 차기 총선, 나아가 대선의 흐름까지 좌우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서울은 인구와 미디어 노출효과가 압도적인 탓에 여당이나 이 지역에서 승리하면 전국 단위 정책 추진의 탄력이 붙는다. 반대로 패배할 경우 국정 기조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

이 때문에 김민석 국무총리의 잇단 ‘서울시정 개입 행보’도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정치적 함의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이 중앙정부의 집행 권한을 활용하면서 오 시장을 정책적·도덕적으로 압박해 ‘서울 탈환’을 위한 첫 포석으로 해석된다.

◆국힘 ‘민주 오세훈 스토킹’ 반격 불구 파급력 저조

여권의 연이은 정책 공세가 이어지자, 국민의힘은 이를 ‘오세훈 스토킹’이라 규정하며 반격에 나서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18일 공식 논평과 지도부 입장을 통해 “총리까지 나서서 오 시장을 스토킹하고 있다”, “총리인가, 스토킹인가”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격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오 시장 보호 대응은 현 시점에서 미흡하다는 평가가 적지 않다. 당 지도부와 원내대표, 일부 주요 인사가 여권의 공세에 대해 ‘오세훈 스토킹’과 ‘관권선거 개입’ 등 강한 반박 메시지를 내긴 했지만, 당 차원의 조직적·전략적 결집이나 체계성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반복된다. 실질적인 정책적 방어전략 마련이나 여론전과 광범위한 총력 지원은 아직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한무경 평택갑 당협위원장장은 “민주당이 서울을 공략 카드로 수도권 전체를 흔드는데, 우리는 수세적 해명에 그치고 있다”며 고심을 전했다.

◆여야 모두 ‘서울 올인’… 본격적인 수도권 대전 예고

결국 서울시장 선거는 내년 지방선거의 ‘상징이자 승패의 분수령’이 되고 있다. 민주당과 정부는 오 시장의 정책 실패 및 도덕성 논란을 ‘정치 프레임’으로 고착시키려 선제공격에 나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향후 총선 및 대선을 위해서라도 서울 방어를 절대적 과제로 삼아 대응체제 재정비에 시급히 나서야 한다는 것이 주문이 나오고 있다. 김영수영남대 정치학과 교수는 “서울 선거에서 이기는 쪽이 한국 정치의 주도권을 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여권은 이미 선제적 공세 국면, 야권은 반격 준비 단계”라고 진단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정가의 전운이 짙어지는 가운데, 서울은 이제 단순한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지형의 향방을 가를 ‘결정적 전장’으로 일찌감치 떠오르고 있다.

이영란 기자 yrlee31@idaegu.com



이재명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 대통령궁에서 열린 국빈방문 공식 환영식에서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 사열대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전투기 영접 비행 ‘UAE 최고예우’ 받아

현지 국무장관 등 일정 동행
최대크기 양국 국기 게양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국빈 자격으로 방문하며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일정을 시작했다. UAE 정부는 대통령 부부의 도착 순간부터 최고 수준의 예우를 갖춰 맞이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대통령 전용기가 UAE 영공에 진입하자마자, UAE 공군 전투기 4대가 전용기 좌우를 호위하며 영접 비행을 펼쳤다. 아부다비 공항에서는 도열병과 화동의 환영 속에 공식 영접행사가 진행됐다. 영접행사에는 칼둔 칼리과 알 무바라크 아부다비 행정청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 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라크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UAE대사 등 고위 인사들이 참석

했다.

UAE 측은 칼둔 행정청장과 알 샴시 국무장관을 이 대통령 부부의 영예 수행인사로 지정해 이번 국빈 방문 전 일정에 동행하도록 했다. 현충원 방문에는 UAE 대통령의 차남인 디압 가발·보훈사무국 부의장이 직접 안내를 맡았다.

UAE 정부는 수도 곳곳에서 양국의 우호를 상징하는 대규모 장식을 마련했다.

공항, 대통령궁, 그랜드 모스크, 숙소 주변에 한국과 UAE 양국의 국기를 게양했다. 특히, 내무부 청사 앞에 설치된 국기는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밤에는 아부다비의 주요 랜드마크인 애드녹(ADNOC), 무바라라, 아부다비 글로벌마켓(ADGM) 외벽에 태극기 조명을 점등해 국빈 방문을 환영했다.

이영란 기자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이용화(840702-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대구가정법원 2025년단12356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정해정, 이철우, 이용서, 이철아 (정해정)경북 칠곡군 왜관읍 중앙로 245-5, 505호(왜관드림뷰)
피상속인(망) : 이용화(84.07.02)2025. 9. 6. 사망
경북 칠곡 왜관읍 중앙로 245-5, 505호(왜관드림뷰)
한정승인수리일 : 2025. 11. 17.
공고일 : 2025. 11. 19.

상속한정승인공고

망 하희현(891129-1*****) 상속에 대한 한정승인에 따른 채권자에 대한 공고, 재산상속 한정승인 시행에 따른 민법 제103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사건번호 : 대구가정법원 2025년단12344 상속한정승인
공 고 인 : 조경숙
대구 동구 안심로 402, 102동 1105호 (신서동, 영조아름다운나날1단지)
피상속인(망) : 하희현(89.11.29)2025. 5. 27. 사망
대구 동구 안심로 402, 102동 1105호 (신서동, 영조아름다운나날1단지)
한정승인수리일 : 2025. 11. 17.
공고일 : 2025. 11. 19.